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4.8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01 한·UAE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발효 절차 완료 p.1

- 02 유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전쟁 장기화 시 174달러 가능성 p.2

- 03 미, "철강·알루미늄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 p.4

- 04 항공기 결항 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반납 면제 p.6

- 05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p.7

1

한·UAE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발효 절차 완료

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협정으로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UAE CEPA)' 비준동의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UAE CEPA는 지난 2021년 10월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간의 협상을 거쳐 2024년 5월 정식 서명 됐다. 이후 2025년 12월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지난 31일 본회의 통과로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UAE 측에 국내 절차 완료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은 양측이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 또는 별도로 합의한 날에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중동 국가와 맺은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우리나라에서 23번째로 발효되는 FTA다. 이로써 한국의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60개국으로 확대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품목의 91.2%에 해당하는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가전, 화장품, 무기류, 과일 등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자원·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인 경제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한·UAE CEPA 발효에 앞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1380) 및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 등 협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유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전쟁 장기화 시 174달러 가능성

에너지 비용 구조적 상승으로 한국 공급망 리스크 확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국제유가와 비료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나프타와 LNG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수급 불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관세·무역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4월 2일 발표한 보고서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이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이번 전쟁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에너지 공급과 물류를 동시에 제약하면서 글로벌 가격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약 31%, 천연가스의 17%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지로, 주요 생산시설 타격과 해협 통항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에너지 시장 전반에 충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브렌트유 가격은 전쟁 직전 배럴당 70달러 초반에서 3월 말 기준 100~12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천연가스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비료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대표적인 질소비료인 요소 가격은 전쟁 이후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과 식량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유가 상승 '구조화'... 최대 174달러 시나리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일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충격의 주요국 파급 효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글로벌 33개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벡터자기회귀모형(GVAR, Global Vector Autoregressive) 분석을 통해 전쟁 전개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종전 시에도 에너지 시설 복구 지연으로 유가는 배럴당 약 90달러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전쟁 이전 대비 약 43% 높은 수준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는 100~117달러 범위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 시설이 직접 타격되는 확진 시에는 배럴당 17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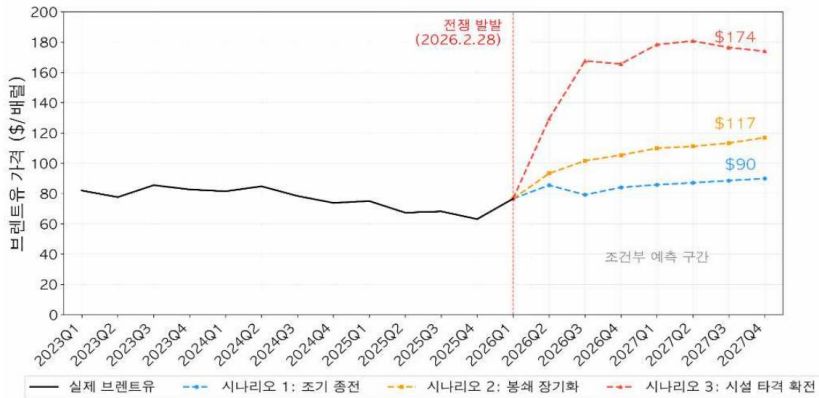
특히 현재 국제유가가 약 108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미 '봉쇄 장기화 시나리오'에 근접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적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2

유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전쟁 장기화 시 174달러 가능성

에너지 비용 구조적 상승으로 한국 공급망 리스크 확대



주: 검은 실선은 실제 브렌트유 분기 평균, 색상 점선은 각 시나리오의 전망 경로. 빨간 수직 점선은 전쟁 발발 시점(2026년 2월 28일). 가로축은 분기, 세로축은 유가(미국 달러/배럴).
자료: 저자 작성.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물류 경로로, 봉쇄 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1973년과 1979년 중동발 오일쇼크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중동 산유국과 이란이 감축한 원유량은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충격의 규모와 파급력은 더 클 수 있다는 평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이번 위기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데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역시 중동 비중이 약 34.4%에 달하기 때문이다.

유가 상승이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 물가와 경상수지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프타와 LNG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크다. 이와 함께 헬륨 공급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헬륨은 반도체, 의료, 첨단 연구 등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공급 차질 시 첨단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

한편, 이란은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오만과 공동으로 감독하고, 통행료 부과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카셈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이동은 평시에도 연안국 이란과 오만의 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오만과 공동의정서를 작성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쟁 전의 규칙이 전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일(현지시간) 전 세계 40여개국 외무부장관들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급 논의에 나섰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부 장관의 주도로 열린 화상회의에는 미국을 제외한 나토 주요 회원국과 걸프국, 한국 등이 참여했으며, 군사적 대응보다는 정치·외교적 수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3

미, “철강·알루미늄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

함량가치 따른 관세 산정 방식 폐기... 세탁기·변압기 등 수출 영향 확대될 가능성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포함된 파생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금속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가전·전력기기 등 주요 수출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미 백악관은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함량가치 50%’에서 ‘완제품 25%’로 변경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등의 함량가치를 산정한 뒤 해당 부분에 50%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글로벌관세(미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품 전체 가격에 25%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초과하면 동일하게 25% 관세가 부과되며, 15% 이하 제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수준을 유지한다.

미 행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기존 방식이 제품별로 계산이 복잡하고 행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의 관세 회피를 차단하고 자국의 철강 산업 보호 효과를 높ی겠다는 의도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미국 내 알루미늄 설비 가동률이 2017년 약 39%에서 현재 약 50.4%로, 철강은 2017년 약 72.3%에서 현재 약 77.2%로 상승했다”며, “미국 내 설비 가동률 80%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루미늄 및 철강 관세 조치가 없었다면 현재 수준의 설비 가동률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3

미, “철강·알루미늄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

함량가치 따른 관세 산정 방식 폐기... 세탁기·변압기 등 수출 영향 확대될 가능성

가전·전력기기 등 파생제품 영향 확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철강 비중이 높은 완제품 산업이다.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변압기 등 전력기기 제품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존에는 금속 함량 부분에만 관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완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10~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관세 부담이 대폭 커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동차부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일부 산업 장비와 전력망 관련 제품에는 2027년까지 15% 수준의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등 품목별 차등 구조도 병행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해당 법은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외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의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한국, 일본, 유럽 등 미국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15%, 영국에는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120~180일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이는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완제품 기준 관세 부과 방식은 기업의 원가 구조와 생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 전략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NBC 등 현지 언론도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생산·조달·수출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4 항공기 결항 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반납 면제

관세청, 결항·회항 시 면세품 반납 간소화... 여행자 편의 확대

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항·회항 시 면세품 반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면서 여행객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결항 또는 회항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여행자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처럼 면세품 회수를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면세품 반납 대상이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절차를 거쳐 귀가할 수 있게 된다.

현행(개정 전)	개정 후(2026.4.1.~)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전원 대기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면세범위 공제 후 반납절차 진행

그동안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외국 반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량 회수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행자의 구매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최대 3~4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이미 개봉 및 사용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로 처리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만 초과분에 해당하는 물품을 회수한다. 이때 여행자는 800달러 범위 내에서 회수 면제 대상 물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00달러 상당의 의류를 단일 품목으로 구매한 경우 해당 물품은 전액 회수 대상이 되지만, 500달러 의류와 300달러 화장품, 500달러 전자제품을 함께 구매했다면 여행자가 선택한 800달러 범위 내 물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봉·사용한 물품은 면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회수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봉·사용했다고 모두 회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면세범위 이내까지만 회수 면제에 해당된다. 또 주류·담배 등 별도 면세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수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함께 면세품 유통 관리의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5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경제·방산·AI·핵심광물 등 총 16건의 MOU 체결, 실질적 협력 기반 강화



국민 방문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국민 방문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4월 1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은 양 국가 모두에게 첫 번째 사례다.

이번 회담 직후 교역, 방산, 미래 산업 및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분야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 최대 경제국으로 양국 교역액 300억달러를 목표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할랄 인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다난타라 국부펀드를 매개로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중앙은행 간 QR 결제 연계 서비스를 개시해 향후 4년간 140억 규모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10년 넘게 협력한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완수를 발판 삼아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 유지·보수·정비 센터 설립 등 포괄적 방산 파트너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비전통 안보 분야인 테러, 재난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5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경제·방산·AI·핵심광물 등 총 16건의 MOU 체결, 실질적 협력 기반 강화

양국의 미래 산업을 위한 첨단 기술과 자원 안보 분야 협력도 진행된다. AI를 활용해 디지털 교육 및 식량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탄소포집저장, 청정에너지 협력과 더불어 1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해 조선 분야 협력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광물 협력 MOU'를 개정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국은 '문화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상호 투자 및 합작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0억달러의 콘텐츠 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86만명 수준의 상호 방문객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 및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이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